

한일대륙붕협정 비준을 둘러싼 한일관계와 중국: 분석 및 함의[†]

Korea-Japan Relations Regarding the Ratification of the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and China: Analysis and Implications

이상현*
Lee, Sang-hyun

목 차

- I. 서 론
- II. 일본국회의 협정관련 심의와 한국의 대일외교
- III. 이해당사국의 동향: 중국의 항의와 미국의 관여
- IV. 결론: 정책적 함의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signed in January 1974, passed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 and subsequently came into effect based on Korean diplomatic documents regarding the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released in 2019.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asons behind the approximately four-year delay in the Agreement's implementation from multiple perspectives and to discuss its current implications.

Key words: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Korea-Japan Relation, Continental Shelf, Joint Development, Korea-Japan Parliamentarians' Union.

[†] 이 연구는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안보융합학과 조교수, 국제정치경제학 박사, brisbane97@hotmail.com

I. 서 론

한일대륙붕협정은 1974년 1월 30일 서울에서 조인되었다. 당일 김동조 외무장관과 우시로쿠 도라오(後宮虎郎) 주한일본대사는 외무부 장관실에서 전문 31조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지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및 그에 따른 4개 부속문서와 전문 4조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지역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및 그에 따른 합의의사록에 각각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정식 서명하였다.¹⁾ 이로써 한일 양국은 대륙붕 분쟁 5년, 그 해결을 위한 직접협상 1년 4개월 만에 양국의 권리주장이 중복되는 남부지역 대륙붕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세계적인 선례를 남겼다.

협정서명 이후 1974년 내에 양국에서의 비준이 성사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협정승인을 위한 법안이 3월 5일 국회에 상정되어 12월 27일에는 국회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일본 국회에서의 심의는 파행을 거듭하였다. 사회당과 공산당 등 야당의 반대는 물론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친중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과 반대론이 속출하여 결과적으로 1978년 6월 협정이 발효되기까지 4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74년에 체결된 한일대륙붕협정의 비준동의안이 일본국회를 통과하여 발효되기까지의 과정을 2019년에 공개된 한일대륙붕협정관련 한국 외교문서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그 역사적 실체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협정이 비준되고 발효되기까지의 과정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밝혀내고, 협정만료를 앞둔 현시점에서 이것이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분석을 위한 연구대상 시기는 한일대륙붕협정이 체결된 1974년 1월부터 1978년 6월까지로 한정하였다.

한일대륙붕협정의 국내 비준과정을 분석한 의미있는 선행연구로는 박민규(朴敏圭 2001), 안도 준코(安藤純子 2015), Masayuki Takeyama(武山真行 2019), 박창건(2021)의 연구가 있다.²⁾ 박민규(2001)는 일본국회에서의 한일대륙붕협정 비준과정을 검토하면서 자민당과 외무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대야당정책을 분석하였다. 박민규의

1) 『경향신문』, 1974.1.30.

2) 朴敏圭(2001), pp. 95-129, 安藤純子(2015), pp. 1-386, Masayuki Takeyama(2019), pp. 276-313.

연구는 한일대륙붕협정에 관한 기존연구가 국제법적 시각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한일관계 및 일본국내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초점을 맞춘 선구적인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안도(2015)는 한국이 일본국회 비준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벌인 데에는 제1차 오일쇼크가 큰 요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일본 국내 비준과정에 있어서 반대 목소리가 컸던 배후에는 1970년대의 악화된 한일관계와 일본정계의 혼란상황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안도의 연구는 한일대륙붕 공동개발 문제를 외교사료에 대한 검증을 통해 역사적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Takeyama(2019)는 일본정부가 각고의 노력 끝에 협정채택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데에는 공동개발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득에 대한 기대보다는 일본 정계 및 경제계 친한파 그룹의 각별한 노력 그리고 한국정부의 끈질기고 열성적인 외교노력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박창건(2021)은 한일대륙붕협정이 많은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긴 했지만, 한일양국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보와 경제라는 공동이익의 확보를 위해 체결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에 입각하되 2019년에 기밀이 해제된 한국 외교문서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발굴을 시도하였다.³⁾ 특히 일본국회의 심의과정과 협정 발효를 위한 한국의 공식·비공식 외교노력 그리고 이해당사국이었던 중국과 미국의 관여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분석과 검증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 장에서는 일본국회에서의 협정관련 심의과정과 한국의 공식·비공식 대일외교를 검토하였다. III 장에서는 협정비준에 영향을 준 국제 환경요인으로 중국과 미국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결론인 IV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3) 2019년 대한민국 외교부가 공개한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이란 제목의 문서는 총 30권(3권 미공개)으로 분량은 7,500여 페이지에 달한다. 이 문서는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5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①1969년 4차에 걸친 대륙붕 자원개발 관련 관련부처 실무자 회의 기록, ②1970~1972년간 3차에 걸친 한일예비 실무자 회담기록, ③1972~1973년간 공동개발협정 문안 작성을 위한 한일실무자 회담기록, ④협정체결부터 발효까지의 일본국회 및 여야정치세력의 동향 및 한국의 대일외교, ⑤ 미국, 중국, 타이완, 북한 등 주변국의 동향 등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④(제14권~24권)와 ⑤(제25권~27권)에 해당하는 외교문서를 활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II. 일본국회의 협정관련 심의와 한국의 대일외교

1. 일본국회에서의 심의과정

한일대륙붕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양국의 외교채널이 중심이 되어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했다고 한다면,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협정비준과 발효를 위한 공방의 무대가 한일양국의 국회로 옮겨가게 되었다. 한편, 당시 국회 안정의식 확보에 실패한 집권 자민당은 여야세력이 거의 대등한 보혁백중(保革伯仲)의 국회하에서 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서는 원만한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정치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협정비준안과 국내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4년 여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심의 과정에는 다나카내각, 미키내각, 후쿠다내각 등 3 내각이 관여하였다. 협정이 발효되기까지 일본국회에서의 심의과정을 정리해 보면 <표-1>과 같다.

■ 표-1. 일본국회에서의 협정비준안 및 특별조치법 심의 ■

내각	회차	국회	회기기간	비고
다나카내각	제72차	정기국회	1973.12.01.-1974.06.03.	
다나카내각	제73차	임시국회	1974.07.24.-1974.07.31.	
다나카내각	제74차	임시국회	1974.12.09.-1974.12.25.	
미키내각	제75차	정기국회	1974.12.27.-1975.07.04.	
미키내각	제76차	임시국회	1975.09.11.-1975.12.25.	
미키내각	제77차	정기국회	1975.12.27.-1976.05.24.	
미키내각	제78차	정기국회	1976.09.16.-1976.11.04.	
후쿠다내각	제79차	임시국회	1976.12.24.-1976.12.28.	
후쿠다내각	제80차	정기국회	1976.12.30.-1977.06.09.	
후쿠다내각	제81차	임시국회	1977.07.27.-1977.08.03.	※국내조치법관련심의
후쿠다내각	제82차	임시국회	1977.09.29.-1977.11.25.	※국내조치법관련심의
후쿠다내각	제83차	임시국회	1977.12.07.-1977.12.10.	※국내조치법관련심의
후쿠다내각	제84차	정기국회	1977.12.19.-1978.06.16.	※국내조치법관련심의

가. 다나카 내각(1972. 7. 7. -1974. 12. 9.)

주지하듯이, 1972년 제6차 한일경제각료회의 당시 한일양국의 정부 수뇌와 일부 각료들에 의해 대륙붕 공동개발에 대한 기본합의가 이뤄진 이후 양국 외교 실무라인을 중심으로 공동개발을 위한 협정안이 작성되어 1974년 1월 서울에서 체결되었다. 하지만 동 협정은 정부차원의 충분한 숙의과정이나 자민당 내부의 사전절충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태생적 한계를 가진 협정이었다. 따라서 협정비준을 둘러싼 국회심의 과정에서는 사회당과 공산당을 필두로 한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였고, 자민당내에서도 아시아·아프리카연구회(이하 AA연)로 대표되는 친중파 의원그룹을 중심으로 신중론과 반대입장이 속출하였다.

다나카 내각은 대륙붕공동개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륙붕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였지만, 김대중 납치사건⁴⁾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박정희 정권과의 유착문제로 인해 야당은 물론 자민당내 AA연 그룹의 반대로 인해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결국 협정안은 가까스로 제72차 정기국회 상정에는 성공하였지만, 회기종료로 인해 심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폐안이 되고 말았다.

나. 미키 내각(1974. 12. 9. -1976. 12. 24.)

1974년 12월 17일, 한국에서 협정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새로 발족한 미키내각도 신의성실의 차원에서 한국과의 보조를 맞추어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하지만 국회 내 여러 정치세력들간 절충이 필요한 협정비준은 자민당내 소수파벌 출신으로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였던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수상에게는 풀기 어려운 난제였다.

미키내각은 1975년 제75차 정기국회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을 중요법안의 하나로 제출하였고, 4월 15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외상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비준승인을 요구하는 취지 설명을 함으로써 협정안에 대한 심의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자민당 AA연 그룹과 야당의 반대에 직면하여 본격적인 실질심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차기국

4) 1973년 8월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씨가 도쿄의 한 호텔에서 중앙정보부(KCIA)에 의해 납치되어 한국 자택 근처에서 발견된 사건으로, 정치적 타결을 위해 같은 해 11월 일본을 방문한 김종필 수상은 유감을 표명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김씨의 한국내 신변자유 보장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김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자, 일본국회는 야당을 중심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정부를 신뢰할 수 없으며, 신뢰할 수 없는 정부와의 조약체결은 승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륙붕협정에 대해 맹렬히 반대하였다. 윤하정(2011), pp. 80-100.

회의 계속심의 안건으로 이월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1976년 제77차 정기국회에서는 미키수상과 미야자와외상이 1월 말 시정방침연설과 외교연설을 통해 협정비준안 통과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지만, 록히드 사건(Lockheed bribery scandals)⁵⁾이 국회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비준안 심의는 연기되었다. 이후 비준안 심의는 5월에 들어 중의원 외무위에서 실질심의를 개시되었지만, 3회에 걸친 8시간의 외무위 심의 후 차기 국회의 계속심의 안건으로 이월되는 데 그쳤다. 9월 21일 개최된 제78차 임시국회에서는 4회에 걸쳐 15시간의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당으로 대표되는 야당 의원들은 김대중 납치사건을 집요하게 제기하며 심의지연 전술로 일관하였다.⁶⁾

다. 후쿠다 내각(1976. 12. 24. -1978. 12. 7.)

미키수상이 1976년 12월 17일 총선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뒤 자민당 친한파 리더인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가 24일 수상에 취임하였다. 후쿠다 수상은 집권과 동시에 협정 조기비준 방침을 정한 뒤 이것이 석유 소비대국 일본이 직면한 에너지 대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후쿠다 내각은 1977년 제80차 정기국회가 진행중이던 2월 14일에 협정비준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1974년의 제72차 정기국회, 1975년의 제75차 정기국회에 이은 세 번째 국회제출이었다. 3월 30일에 개시된 외무위원회에서의 실질심의는 초반부터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사회당과 공산당은 심의거부와 지연전술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집권자민당은 여당이 약세인 일본 참의원에서의 비준안 표결을 피하되, 일본헌법이 정한 ‘중의원 우위의 원칙’에 따라 중의원 통과만으로 비준안 성립을 달성하는 전략을 마련하였다. 중의원 우위의 원칙이란 일본 헌법 제60조 2항 및 61조에 규정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예산과 조약의 비준은 중의원을 통과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참의원의 의결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회기종료 한 달 전인 4월 28일까지는 중의원 통과를 마쳐야 했다.

5) 미국의 록히드(Lockheed)사가 자사의 대형항공기를 일본에 판매하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일본 정계에 부린 사건으로 1976년 7월에는 다나카 가쿠에이 前 수상이 수뢰혐의로 체포·기소되었다.

6) [한국외교문서] 주일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JAW-10601), 1976.10.22., pp. 234-235.

이런 연유로 일본 국회 외무위를 둘러싼 여야대립은 4월 27일 한차례 고비를 맞이하였다. 자민당 수뇌부의 인식은 제80차 국회 외무위에서만 30시간 이상의 심의실적을 쌓았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27일 외무위를 통과시키고 28일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⁷⁾ 결국 자민당 수뇌의 결심으로 27일 밤 중의원 외무위는 4야당이 불참하고 자민당과 민사당만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하여 협정비준안을 전격 통과시켰다.⁸⁾ 하지만 이후 협정비준안은 당초 예정일인 28일을 훨씬 경과한 5월 10일이 되어서야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민사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참의원에 회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리 시게루(保利茂) 의장은 5월 28일 개최된 중의원 본회의에서 12일간의 회기연장안을 발의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자민·민사의 찬성으로 회기연장안이 통과되면서 협정비준안은 가까스로 자연성립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⁹⁾ 결과적으로 한일대륙붕협정은 1960년의 미일안보조약에 이어 격렬한 여야대립속에서 참의원 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자연성립된 협정으로 일본헌정사에 기록되었다.

한편, 일본 국회에서의 협정비준 통과가 곧바로 양국간 비준서 교환과 공동개발 착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본의 경우 협정이행을 위해서는 ‘한일대륙붕개발 특별조치법’¹⁰⁾이라고 하는 국내법을 추가로 제정해야 했다. 기존 광업법의 경우 적용범위가 영토·영해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해상에 위치한 공동개발구역에서의 일본측 광업권을 특별입법 제정을 통해 재설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¹¹⁾ 한국정부는 일본의 국내법 제정과는 별도로 비준서를 먼저 교환해서 협정의 조기발효를 기하기를 원했지만, 일본측은 비준서를 교환하더라도 국내법의 제정없이 대륙붕개발에 착수할 수 없으며, 국내법 입법에 앞서 조약을 발효시킨다는 것은 조약시행에 관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당연하게도 특별조치법 제정문제 또한 야당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우여곡절 끝에 1978년 제84차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의 최종성립 여부는 참의원에 맡겨지게 되었다. 6월 13일 열린 참의원 상공위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가부동수인 10대 10의

7) 『동아일보』1977.4.27.

8) 『조선일보』1977.4.28.

9) [한국외교문서 주일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JAW-05951), 1977.5.31., pp. 100-102.

10) 정식명칭은 「일본국과 대한민국의 양국에 인접하는 대륙붕 남부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르는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11) 『毎日新聞』1977.11.15.

상황에서 위원장의 결재로 법안이 가결되었고,¹²⁾ 6월 14일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표결 결과 130대 107의 찬성다수로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되었다.¹³⁾ 이후 한일국교정상화 기념일인 6월 22일 일본 외무성에서는 소노다 스나오(園田直) 외상과 김영선 대사간에 비준서가 교환되었고, 이로써 한일양국은 공동이익 및 선린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해양자원 공동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2. 한국의 대응

한국정부는 일본국회에서 협정비준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강온 양면책을 구사하였다. 하나는 일본에 대해 전방위적인 설득외교를 전개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일본의 비준지연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단독개발 준비에 착수함으로써 일본 국회가 조속히 비준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다.

가. 대일 설득외교

먼저, 한국정부는 일본국회의 협정 비준안 조기 성립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일외교를 전개하였다. 예컨대 1976년 말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인 후쿠다가 수상에 선출된 것을 마지막 기회로 본 한국정부는 1977년 1월 15일 주일대사에게 보내는 훈령을 통해 협정 성립을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지시하였다.¹⁴⁾ 또한 1978년 4월 20일, 일본 국내특별조치법 조기처리 촉구를 위한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를 거쳐 외무부가 작성한 「한일대륙붕협정 일국내조치법의 조기처리 촉구 대책(안)」에도 한국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일접촉 및 설득계획이 드러나 있다.¹⁵⁾ 이를 토대로 한국정부가 일본국내에서 실시한 전방위적인 대일외교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상, 관방장관, 외상, 통산상 등 일본정부내 최고위층 인사에 대한 설득외교이다. 특히 한국정부는 협정비준에 있어 중요한 국면이라 판단될 시에는 총리에 대한 직간

12) [한국외교문서] 주일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JAW-06265). 1978.6.13., p. 163.

13) [한국외교문서] 주일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JAW-06282). 1978.6.14., p. 167.

14) [한국외교문서] 외무부 장관이 주일대사에게 보내는 전문(WJA-01140). 1977.1.15. pp. 20-21.

15) [한국외교문서] 외무부 「한일대륙붕협정 국내조치법의 조기처리촉구대책(안)」. 1978.4. pp. 214-222.

접적인 접촉을 시도하여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였다. 예컨대 다나카 내각 시기인 1974년 5월 17일, 자민당내 AA연 그룹의 설득을 위해서는 수상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김영선 주일대사는 니카이도 스스무(二階堂進) 관방장관을 찾아 협정의 국회 승인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으로 다나카 총리와 친분이 깊은 국제흥업의 오사노 겐지(小佐野賢治)를 만나 총리에게 한국의 입장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¹⁶⁾ 한편, 1977년 후쿠다 내각하에서 협정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4월 21일, 김영선 대사는 후쿠다 총리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라는 본부의 훈령을 받고 총리와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외무담당 비서관을 만나는 데 그쳤다.¹⁷⁾ 그러나 이보다 두 달 앞선 2월 17일 한일·일한 의원연맹 제6차 총회 참석을 위해 도쿄를 방문한 김종필 회장은 후쿠다 총리와 단독 면담을 가지고 국회 회기내 비준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총리의 의사표명을 이끌어 낸 바 있다.¹⁸⁾

둘째, 집권자민당에 대한 접촉을 강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일본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의 경우 먼저 정책·법안심의를 담당하는 자민당 정무조사회(政務調査会) 산하의 외교부회, 수산부회와 같은 부회(部會)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정책심의회(정무조사회의 결정기관)와 총무회(總務會)의 양해를 거친 뒤 각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에 제출된 뒤에는 국회대책위원회(国会対策委員会)가 책임을 지고 야당 국회대책위원회와 교섭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주일한국대사관은 자민당 접촉을 강화함에 있어 각 파벌대표는 물론 외교부회, 정무조사회, 총무회, 국회대책위원회의 간부에 대한 접촉을 강화하였는데, 이 경우 친한파 의원과의 접촉이 주를 이루었다.

셋째, 한국정부는 자민당과의 공조에 노력하는 한편으로 협정비준에 반대하는 야당에 대한 설득외교에도 주력하였다. 대야당 설득외교는 공명당, 민사당, 신자유클럽 등 중도정당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가장 역점을 둔 정당은 민사당이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수세력과 혁신세력의 의석수가 거의 동등한 보혁백중(保革伯仲) 상황하에서 자민당은 가까스로 과반수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협정승인안과 국내 특별조치법의 의회통과는 민사당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당초 민사당은 협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는 1975년 7월 4일 중의원 외무위

16) [한국외교문서] 주일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JAW-05332), 1974.5.20., p. 204.

17) [한국외교문서] 외무부장관이 주일대사에게 보내는 전문(WJA-04309), 1977.4.16., p. 347.

18) [한국외교문서]「김종필 회장의 후쿠다 총리 면담」, 1977.2.17., pp. 225-227.

원회에서 나가마츠 에이치(永松英一) 의원이 협정에 대한 민사당의 입장을 개진한 데에도 나타난다. 그는 중국과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한국과 일본의 합의만으로 미국의 자본을 도입하여 대륙붕을 개발하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¹⁹⁾ 그러나 1977년 4월 민사당의 가스가 잇코(春日一幸) 위원장의 결단하에 한국과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협정 찬성을 천명하였고, 이것은 민사당의 방침이 되었다.

이처럼 민사당이 당초의 협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철회하고 자민당과의 정책공조를 의미하는 찬성으로 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한국정부의 일본 야당에 대한 설득외교에서 찾을 수 있다. 1974년 협정이 체결된 이후 집권 자민당에 대한 설득외교에 집중하고 있던 한국정부는 1975년 미키 내각하의 제75회 국회에서 협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조차 좌절되자, 자민당 일변도 외교에 대한 한계를 실감하게 되었다. 미키 내각하에서의 자민당의 응집력 쇠퇴와 더불어 보혁백중 국회에서의 자민당 일당에 의한 법안통과가 불가능해지고 야당과의 사전협상이 중요성을 더하게 되면서 협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대야당외교, 특히 한국에 우호적인 가스가 위원장이 속한 민사당에 대한 설득외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²⁰⁾ 이러한 가운데 1975년 자민당과 민사당 의원이 참여하는 일한의원연맹의 결성은 한국정부가 대민사당 설득외교를 전개하는 데 있어 촉매제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민사당은 일한의원연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모든 민사당 의원들은 한국과의 소통과 우호친선을 위해 의원연맹에 가입하였고, 의원연맹은 양국의 정치인들을 연결하는 비공식 채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넷째, 친한단체인 일한협력위원회와 일한의원연맹, 일한친선협회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한 의원외교에도 주력하였다. 자민당내에는 1950년대 중반 수상에 취임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를 중심으로 조직된 우파 정치세력으로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친한파(親韓派)가 존재하였다. 이들은 한일간 친선협력을 위한 준정부조직이라 할 수 있는 일한협력위원회의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이 위원회의 상임고문이었던 야쓰기 가즈오(矢次一夫)는 민간차원에서 1970년에 한일대륙붕 공동개발 구상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로 1972년 한일정부간 대륙붕 공동개발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결정적인

19) 第75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 (第28号) 1975.7.4.

20) [한국외교문서] 주일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JAW-05848), 1975.6.2. p. 194; 『조선일보』 1975.7.11.

역할을 하였다.²¹⁾ 이러한 연유로 연 2회 개최되는 한일협력위원회 합동상임위원회에서는 협정비준 문제가 주요의제로 논의되었고, 한국측은 일본에 대해 협정의 조기비준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고 압력을 가하는 자리로 활용하였다. 실제로 1975년에 개최된 제12회(1.12~14) 및 제13회(12.8~9일) 합동상임위원회에서는 비준 지연에 대한 사과와 조기 비준 노력을 약속하는 다나카 다쓰오(田中達夫)와 기타자와 나오키치(北沢直吉) 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²²⁾

이 외에도 친한파는 당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한의원간담회(1968), 일한의원간친회(1972), 일한의원연맹(1975) 등 다양한 의원그룹을 결성하였다.²³⁾ 일한의원간친회를 계승 발전시키고 야당인 민사당도 참여하는 일한의원연맹이 1975년 결성되자, 한국정부는 협정 비준안 성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일한의원연맹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었다. 1976년 말 친한파 인물인 후쿠다가 수상에 취임하자 일한의원연맹은 한층 적극적으로 협정 비준안 성립에 나섰다. 1977년 2월 16일 개최된 한일·일한의원연맹 제6차 도쿄총회에서는 “일한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문제는 한국국회가 이미 비준한 사실에 비추어 일본의원단은 일본국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야 함을 표명하였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반영되었다.²⁴⁾ 4월 중순에는 사회당과 공산당이 심의를 거부하고 지연전술을 펴면서 비준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한일의원연맹의 이병희 간사장과 최영철 상임간사가 일본정계 설득을 위해 22일 일본에 급파되었다.²⁵⁾ 이들은 1976년 한일생사분쟁이 정치적 타결로 해결될 당시 막후협상의 주역으로 일본 자민당 중진들과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정계에 대한 의원외교 실시에 있어 적임자였다.²⁶⁾

다섯째, 우호적인 여론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이다. 한국 정부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일본측에 촉구하는 한편으로 민간석유 및 자원관계 이해당사자, 연구기관을 내세운 여론조성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예컨대, 일본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촉구의 결실로 볼 수 있는 것이 1977년 4월 외무성 정보문화국이 발간한 『한일대륙붕협정 조기체결이 필

21) 山本剛士(1983), p. 124.

22) [한국외교문서] 한일협력위원회사무국, 「제12회합동상임위원회회의록」, 1975.1. 12., p. 54; 「제13회합동상임위원회회의록」, 1975.12.8., p. 92.

23) 朴敏圭(2001), pp. 117~118, 池田慎太郎(2015), p. 57.

24) [한국외교문서] 「한일의원연맹 6차 총회 공동성명서」 1977.2.26., pp.241~242.

25) [한국외교문서] 외무부 아주국(1977.6.9), p. 239.

26) 『매일경제』, 1976.4.12.

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소책자이다.²⁷⁾ 이 책자는 ①매우 유망한 해저석유개발, ②현실적이고 획기적인 공동개발구상, ③국제신의 준수의 중요성, ④한국의 단독개발 회피 등의 이유를 들어 협정체결이 일본의 국익에 합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일관계에 장애가 된다거나 경제수역이론이 대륙붕이론에 우선한다는 등의 국내비판에 대해서도 그것이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논파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국내언론을 통해 비준을 지연하는 일본을 비난하는 사실을 게재하여 반일여론을 조성하고, 일본언론을 통해서도 조기 비준을 위한 여론조성에 나섰다. 비준 성립이 막바지이던 1977년 5월 2일, 친한파의 대부인 기시 전 총리와 공동개발 구상을 제안한 야쓰기가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동개발은 일본이 먼저 제안했다는 증언과 함께 협정을 방치하고 있는 일본 정치권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²⁸⁾ 이는 일본언론을 통한 여론조성 캠페인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나. 대응조치로서의 단독개발

일본국회의 비준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조치는 미키내각인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5년 제75차 정기국회에서 협정안에 대한 실질심의가 연기되고 차기국회의 계속심의 안건으로 이월되자, 외무부는 주한일본대사관 마에다 도시가즈(前田利一) 공사에게 협정의 조기비준을 촉구하는 구상서를 수교하였다.²⁹⁾

이듬해인 1976년 제77차 정기국회에서 재차 비준안 통과가 절망되자 국내에서는 대일 강경론이 대두되었다. 청와대는 4월 중순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하여 단독개발에 따르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집중검토에 들어갔다. 관계부처 회의는 4월 1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월 24일 제4차 회의까지 네 번에 걸쳐 개최되었다.³⁰⁾ 4월 26일에는 회의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박동진 외무장관은 니시야마 아키라(西山昭) 대사를 불러 국내의 단독개발 여론을 전제한 뒤 협정비준이 늦어질 경우 단독개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³¹⁾

27) 外務省情報文化局(1977), pp. 1-13.

28) 『동아일보』, 1977.5.2.

29) [한국외교문서] 대통령각하 외무부 보고사항(방조741-1205호), 1975.9.13., p. 271.

30) [한국외교문서]「대륙붕 비준안 심의」, 작성일 불명, p. 118-119.

31) [한국외교문서]「대륙붕 비준안 심의」, 작성일 불명, p. 120.

이런 가운데 1976년 12월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후쿠다가 수상에 선출되자 한국정부는 크게 고무되었다. 1977년 제80차 정기국회에서 사회당과 공산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재차 비준안 심의가 지연되자, 3년을 인내로 일관해 온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하에 강력한 외교적 압박에 나섰다. 정부는 4월 2일 만반의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륙붕 단독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³²⁾

4월 28일 외무부가 작성한 「대륙붕개발 추진계획」이란 제목의 문건은 당시 한국정부가 검토한 단독개발 구상의 실태를 보여준다.³³⁾ 이 문건은 단독개발의 방식으로 협정을 전면 파기하고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제1안>과 협정에 따른 공동개발을 조건으로 하되 한국이 탐사작업에 우선 착수하는 <제2안>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검토한 뒤 <제2안>을 결론으로 제안하고 있다. <제1안>의 경우 일본과 공동개발시의 복잡한 절차가 불필요하며 조기 시추탐사로 석유부존 여부를 판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외교 및 개발 측면에서 이점을 상쇄하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³⁴⁾ 한편 <제2안>의 경우 <제1안>과 동일한 문제점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①협정파기가 아님, ②한국의 아량으로 호의적인 국제적 반응 확보, ③일본의 강경자세 약화, ④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일본의 제소명분이 없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제시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정부는 협정을 파기하고 단독개발을 강행할 경우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려했을 때 협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단독탐사에 착수하되 일본이 차후 비준시 개발참여를 허용하는 유연책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2안>을 선택하더라도 문제는 단독탐사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남게 된다. 이 문건은 7광구 조광권자인 코암(KOAM)사에게 단독탐사를 타진 중에 있지만, 만일 美 정부의 압력으로 탐사를 포기할 경우 제3국 석유회사 선정을 추진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외국 용역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직접 탐사

32) 『중앙일보』, 1977.4.2.

33) [한국외교문서] 외무부, 「대륙붕개발 추진계획」, 1977.4.28., pp. 2-29.

34) 제1안이 가진 외교적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①양국간에 체결된 협정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외교분쟁 야기, ②일본의 보복으로 한일경제협력, 교역, 재일동포 문제 등에 악영향, ③자민당 친한파 세력의 입지 약화, ④일본측의 자구행위, ⑤일본이 국제해양법 회의에서 한국에 불리한 주장 제기, ⑥대륙붕 문제에 대한 중국의 압력가중 우려 등이 제기되었고, 개발적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①미국의 KOAM사에 대한 압력, ②시추 특수장비 사용상 어려움, ③시추 용역업체의 탐사시추 불응, ④선제 및 중업원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호 불가, ⑤일본의 시추작업 방해, ⑥일본측의 생산물 수송 방해, ⑦시추결과 석유가 발견되지 않을 시 단독위험 부담 등이 제기되었다.

를 추진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여기서 기술과 재원이 부족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제2안>을 선택하더라도 이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월 3일에는 대륙붕 단독개발 대책회의가 상공부 차관실에서 관련부처 실무자의 참석하에 열렸다.³⁵⁾ 회의에서는 일본이 대륙붕협정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처방안 중에서 단독탐사에 착수하되 일본이 차후 비준시 개발 참여를 허용하는 안을 중심으로 상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박동진 외무장관은 이날 주일대사에게 보내는 전문을 통해 일본국회의 심의 결과를 관망하되, 일본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관계부처는 대비책을 검토, 완성키로 하고 실시 시기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키로 하였다는 정부방침을 전달하였다.³⁶⁾ 하지만 다행히도 협정 비준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극적으로 자연성립을 보게 되면서 단독개발의 필요성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이번에는 특별조치법 제정문제가 야당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외무부는 또다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륙붕 일국내 조치법 처리지연시 대비책」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다.³⁷⁾ 주목할 점은 ①“보복적 조치는 가급적 자제하고 한일간의 우호관계는 해치지 않도록 한다”, ②“협정 발효를 통한 한일간 공동개발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되, 협정의 테두리 내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가능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하여 대일 우호적인 기본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시추를 제외한 단독탐사 준비가 대응조치로 제시되었다. 즉 비준서 교환 후 일측이 추후 참여하는 조건으로 한국이 우선 탐사하되, 그 활동을 탐사에만 한정함으로써 어디까지나 국내조치법을 국회에서 처리토록 일측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한국의 단독개발 시도는 결과적으로 일본에 대한 압박카드로서 적절히 활용되었다. 일본 국회에서의 대륙붕협정 심의과정에서 한국의 단독개발 움직임은 비준안 조기통과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제기되었다. 일본언론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들이 보도되면서 협정에 부정적인 일본여론을 뒤흔드는 충격과로써 일정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리하자면, 일본국회의 비준지연이 이어지면서 국내에는 일방적인 탐사개발을 촉구하는 대일 강경론이 등장하였고, 한국정부는 조기비준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일 압력수단으로 잠정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단독

35) [한국외교문서]「대륙붕 단독개발 대책회의 내용」, 1977.5.3., pp. 145-151.

36) [한국외교문서] 외무부장관이 주일대사에게 보내는 전문(WJA-0548), 1977.5.3., p. 157.

37) [한국외교문서] 외무부, 「대륙붕 일 국내조치법 처리지연시 대비책」, 1978.4., p. 195.

개발 방식을 검토한 결과 협정정신을 존중하여 협정 파기를 통한 단독개발은 지양하되, 초기 지질탐사와 시추를 분리하여 한국이 탐사작업에 우선 착수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이는 기술과 재원이 부족한 당시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었다. 또한 이는 한국정부가 단독개발을 진지하게 검토하던 1976년 4월, 리차드 스나이더(Richard Sneider) 주한미국대사가 일본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면서 한국측에 제안한 방안이기도 했다.³⁸⁾

III. 이해당사국의 동향: 중국의 항의와 미국의 관여

1. 중국의 항의와 한국·일본의 대응

가. 중국의 항의

한일대륙붕협정은 한일 양국간에 체결된 협정이지만, 일본국회에서 비준동의안과 특별조치법이 통과되는 데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은 다름아닌 중국문제였다. 중국은 한일대륙붕협정에 대해 항의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1970년 12월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통해서다. 민간 친선협력기구라 할 수 있는 한일협력위원회와 일화협력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한·일·타이완 3국 연락위원회가 11월 11일 개최한 설립총회에서 해양자원 공동개발에 대해 합의하자³⁹⁾, 중국은 『인민일보』를 통해 동중국해의 대륙붕 개발권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3개국의 공동개발 구상을 언급,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발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⁴⁰⁾ 중국 외교부는 이듬해인 1971년 12월 30일에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인근 해역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공식성명을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1973년 3월 4일에는 중국의 국영통신인 신화사가 황해에서 추진하는 美 걸프(Gulf)사의 2광구 탐사시추에 대

38) [한국외교문서] 「대륙붕협정 비준안 심의」, 작성일 불명, pp. 127-128.

39) 한일협력위원회 및 일화협력위원회, 한·일·타이완 3국 연락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상현(2022), pp.36-47 참조.

40) [한국외교문서] 「황해 및 동지나해에 있어서의 중국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주장과 관계국가의 태도」, 작성일 불명, p. 273.

해 한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중간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국제석유자본을 내세운 일방적인 대륙붕 개발은 용인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권리를 유보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1974년 1월 30일 한일대륙붕협정이 체결되자, 중국 외교부는 2월 4일 항의성명 발표를 통해 ①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은 중국과 관련국 간 합의를 통해서 결정될 문제이고, ②한일협정은 중국의 주권침해 행위이며, ③일방적인 개발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한일양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¹⁾ 중국의 항의성명은 같은 해 1월 석유자원 매장 가능성이 있는 남중국해의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를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한 사실로 봤을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태도 표명이었다. 이에 대해 중앙정보부(KCIA)는 중국의 항의성명이 위협적 요소와 타협적 요소를 동시에 가진 강온 양면적 성격을 띤 것이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⁴²⁾ 요컨대 중국의 성명은 중국의 국내 불안에서 오는 대외 강경외교의 측면에서 보자면 실행행사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주권수호 의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분쟁가능성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중일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대소 견제 차원에서 일본과의 연대가 필요하고 국내산업 재건을 위해서도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국간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표명이란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중국은 일본 국내정치 과정에서 협정비준안과 특별조치법이 일본국회를 통과하는 등 중요한 국면을 지날 때마다 항의성명 발표를 주저하지 않았다. 예컨대 한일대륙붕협정안이 1977년 6월 13일 일본국회를 통과했을 때, 중국 외교부는 당일 저녁 항의성명 발표를 통해 “동중국해 대륙붕은 중국 대륙의 영토의 자연연장이며 중국은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하여 침해받을 수 없는 주권을 갖는다. 동중국해 대륙붕과 이에 관련된 그 이외 국가와의 구역은 중국과 관계 국가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와 한국당국이 중국 몰래 승인한 일한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은 전혀 불법적인 것으로 무효이다. 어떠한 국가 및 개인도 중국정부의 동의없이 동중국해 대륙붕 개발 활동을 진행한다면 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⁴³⁾

41) [한국외교문서]「74.2.4. 중공의 외교부 성명」, 작성일 불명, p. 10.

42) [한국외교문서] 국외일일정보(1974.3.9.), pp. 60-66.

43) [한국외교문서] 주일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JAW-16337), 1977.6.14., pp. 43-44.

나. 중국의 항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

중국이 1970년 12월 4일 『인민일보』를 통해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표명하였을 때 한국 정부는 중국의 권리주장이 한국의 해저광구와는 무관하며, 한·일·타이완 3국 연락위원회의 공동개발구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호응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한중간에는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⁴⁴⁾ 따라서 후술하듯이, 1971년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는 미국이 자국 석유회사에 대해 시굴탐사 중단 등 압력을 행사해 왔을 때 한국 정부는 현상유지적 차원에서 석유개발회사에 대해 계약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지속적인 시굴을 촉구하였다.

1974년 2월 4일 한일대륙붕협정 체결에 대해 중국이 항의성명을 발표하자, 외무부는 이틀 뒤인 6일 반대 성명을 통해 1973년 3월 16일의 외무부 성명과 같이 어느 때라도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한 뒤 이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천명하였다. 여기서 1973년 3월 16일의 외무부 성명이란, 앞서 언급한 3월 13일 미 걸프(Gulf)사의 황해 2광구 탐사시추에 대한 중국 신화사의 비난 성명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을 말한다. 정부는 외무부 성명을 통해 대륙붕 경계획정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여 중국의 정식 국명을 처음으로 인용하는 등 중국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보였었다.⁴⁵⁾ 이후 중국에 대한 정식 호칭이 국가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부정하긴 했지만, 한국이 미중관계 개선으로 대표되는 아시아의 화해무드에 편승하여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보낸 첫 신호탄임은 분명하였다.

외무부는 1974년 3월 13일 중국의 항의성명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일대륙붕협정에 대한 중공 및 북괴의 반응과 우리의 대책』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다.⁴⁶⁾ 이 문건에서 제시된 한국의 기본 방침은 기존 개발계획을 예정대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되 중국의 입장을 타진하고 중국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예정대로 한일대륙붕협정 비준과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단독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조광권자의 의무이행을 촉구해 나가되, 중국과의 협의를 위한 문호를 계속적으로

44) [한국외교문서] 작성자 불명(작성일 불명), pp. 273-278.

45) 『동아일보』1973.3.17.

46) [한국외교문서] 외무부(1974.3.13.), pp. 170-182.

개방하고 미국, 일본과 긴밀한 협의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침하에 외무부는 중국과의 교섭가능성 타진을 위해 중국과의 외교채널을 확보한 미국과 서방 우방국에게 한중교섭 알선 역할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들로부터 돌아온 반응은 부정적이었다.⁴⁷⁾ 1974년 호주 외교부가 주중호주대사관에 훈령을 내려 중국이 직접 한국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타진했지만, 중국 외교부의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한 한국과의 직접협상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⁴⁸⁾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중국정부는 이후 한국의 협상요구에 어떠한 구체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외무부는 1978년 시점에서 대륙붕을 둘러싼 한중 양자협정의 또는 한일중 3자협정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공식접촉 계기가 될 수 있고, 북중관계를 소원화시키며 대륙붕 문제에 관한 중국과의 알력이 해소될 수 있지만, 한중간 국교부재, 대소전략상 대북 접근 노력 등의 정세에 비추어 중국은 한국과의 대륙붕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⁴⁹⁾

다. 중국의 항의에 대한 일본의 대응

일본정부는 1974년 2월 4일에 발표된 중국 외교부의 강력한 항의성명이 비록 정식 통고가 아닌 신화사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긴 하더라도, 1972년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정부는 중국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은 피한다는 의미에서 대외적인 성명발표는 삼가되, 외상이 직접 국회에서 일본의 입장을 밝히는 방식을 택했다.⁵⁰⁾ 2월 6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상은 인접 국가간의 대륙붕 관할경계는 보통 중간선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한일대륙붕협정 교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답변하였다.⁵¹⁾ 또 중국과의 사전합의가 없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협정체결전에 중국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일 간 및 한중간에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한중간 국교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합의

47) [한국외교문서] 외무부 동북아 1과(1974.2.5.), p. 13.

48) [한국외교문서] 외무부 아주과(1975.9.10.), p. 230.

49) [한국외교문서] 외무부(1978.5), pp. 10-12.

50) [한국외교문서] 주일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JAW-02180), 1974.2.11., pp. 73-74.

51) 第72回国会衆議院予算委員会(第13号), 1974.2.6.

는 비현실적이라는 판단하에 사전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고 설명한 뒤, 중국이 향후에 협의를 제의해 오면 이에 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2. 미국의 관여

전통적으로 국제 석유시장에서는 석유 메이저로 불리는 미국과 유럽의 석유기업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산유국들이 자원민족주의에 힘입어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결성하고 국제 석유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 석유 메이저들은 중동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동 이외 지역의 유전개발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 동중국해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해저유전개발 붐이 일어나게 된 배후에는 이러한 국제 석유정세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미국은 1960년대 후반 동중국해 유전개발을 위한 탐사에 적극적이었다. 미국은 1968년 동중국해의 해저지질 탐사를 추진하는 유엔 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항공탐사 전용기와 조사선을 파견하는 등 지질탐사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1969년 5월에는 동중국해와 황해에 대한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의 부존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른바 에머리 보고서(Emerly Report)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즈음 미국은 동중국해 해양유전 개발을 둘러싼 주변국간 분쟁을 우려하여 신중론으로 노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노선변경의 배경은 1969년 1월 출범한 닉슨(Richard Nixon) 정부의 대아시아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닉슨 정부의 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베트남으로부터의 명예로운 철수였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절실하였다. 당시 미국계 석유회사인 걸프사는 1970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한국 및 타이완과 유전탐사 계약을 체결하고 센카쿠열도 주변을 포함한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유전탐사에 착수하고 있었다. 닉슨정부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고, 걸프사의 동중국해 유전탐사 활동이야말로 중국을 자극하여 군사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하에서 미국은 한국정부와 걸프사에 대해 개발 중지압력을 가하였다. 주한미국대사관의 언더힐(Francis Underhill) 공사는 1971년 3월 18일 정규섭 외무차관보

와 가진 면담에서 중국이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더 이상 美 석유회사에 대한 군사적 보호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임을 통고하였다.⁵²⁾ 4월 9일에는 美 국무부의 찰스 브레이(Charles W. Bray)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황해와 동중국해에서의 美 석유회사의 활동을 중지하도록 미국에 정식으로 요청해 왔음을 밝힌 뒤, 중국의 무력개입 위협 및 자국민의 안전과 탐사선 비밀장비의 안전을 위해 걸프사에 대해 활동중지를 요청하였음을 공표하였다.⁵³⁾ 5월 26일에는 주한 미국국제개발처(USAID) 아들러(Michael Adler) 처장이 윤석현 외무차관을 찾아 비망록(Aide-Memoire)을 수교하였다. 비망록의 골자는 중국과 북한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미국의 탐사장비 사용을 불허함과 동시에 미국회사들은 군사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⁵⁴⁾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압력에 의한 탐사작업 중단은 미국이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대륙붕 광구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었다.⁵⁵⁾ 한국정부는 대륙붕에 대한 중국의 권리주장이 한국의 해저광구와 무관하며, 한·일·타이완 3국 민간기구의 공동개발 구상에 정부가 호응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한중간에는 대륙붕 분쟁이 없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하였다.⁵⁶⁾ 결과적으로 한미양국은 걸프사가 제3국 출신의 기술자와 기자재(파나마 국적의 선박과 장비)를 사용하여 유전탐사를 계속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다.⁵⁷⁾

그러나 미국은 1975년 들어 재차 한국정부와 자국 석유회사에 대해 개발중지 압력을 가해 왔다. 3월 4일 허위츠(Edward Hurwitz) 정무참사관은 김동휘 차관보에게 대륙붕 탐사문제에 관한 국무부의 훈령을 통고하였다. 훈령의 내용은 한반도 연안 대륙붕 시추탐사 작업에 있어 제3국 정부와의 관할권 쟁의를 고려, 美 정부는 이러한 대륙붕 시추로 인하여 생기는 인명이나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일체 보호책임을 질 의사가 없음을 각 기업에 알렸다는 것이었다.⁵⁸⁾ 문제는 이번 통고에는 제3국의 선박과 기재를 이용한 탐사

52) [한국외교문서] 외무부, 「황해 및 동지나해에서 있어서의 중공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주장과 관계국가의 태도」, 작성일 불명, p. 273.

53) 龜田晃尚(2021), pp. 39-40.

54) [한국외교문서] 「한국 근해 석유탐사활동과 관련한 미국정부의 입장 및 조치」, 작성일 불명, pp. 83-86.

55) [한국외교문서] 외무부 아주과(1975.9.10), p. 230

56) [한국외교문서] 외무부, 「황해 및 동지나해에서 있어서의 중공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주장과 관계국가의 태도」, 작성일 불명, p. 273.

57) [한국외교문서]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 작성일 불명, p. 149.

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기존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25일에는 잉거솔(Robert S. Ingersoll) 차관이 김동조 장관과의 면담에서 1973년 시추 당시 중국 함정이 시추현장을 포위 감시한 바 있음을 언급한 뒤, 향후에는 중국이 구두항의 이상의 행동을 취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⁵⁹⁾ 실제로 중국이 1973년 2월과 3월 걸프사가 서해에서 시추작업을 하고 있을 때 세 차례에 걸쳐 군함을 파견하였다는 사실은 『뉴욕타임즈』 및 『워싱턴 포스트』의 동아시아 특파원으로 이 문제를 1년에 걸쳐 취재해 온 셀리그 해리슨(Selig S. Harrison)의 『포린 폴리시』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⁶⁰⁾ 4월 7일에는 허위츠 정부참사관이 외무부 미주국장을 방문하여 한국정부가 걸프사의 시추 탐사의무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해 왔다.⁶¹⁾

이런 가운데 대응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가 4월 11일 외무부 아주국장실에서 개최되었다. 협의를 통해 외무부는 美 석유회사의 제3국 선박과 인원을 동원한 탐사활동을 미국이 허용해 주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교섭하고, 상공부는 이미 계획된 시추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美 석유회사에 촉구하며, 국방부는 탐사현장 경비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과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⁶²⁾

5월 9일 김동조 외무부 장관은 주미대사에게 보내는 훈령을 통해 대륙붕 제4광구 시추작업 추진에 관한 정부입장을 전달한 뒤 국무부 고위층과의 교섭을 지시하였다.⁶³⁾ 유종하 참사관은 5월 15일 오도노휴(Daniel O'Donohue) 한국과장과 만나 교섭한 뒤, 28일에는 동남아 출장중인 하비브(Philip C. Habib) 차관보를 대신하여 에드몬드(Lester Edmond) 경제담당 부차관보를 방문하여 대륙붕 관련 협조를 요청하였다.⁶⁴⁾ 하지만 에드몬드 부차관보는 중국이 제1차 오일 쇼크 이후 대륙붕 자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이 탐사를 희망하는 4광구에 대해서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여

58) [한국외교문서] 면담요록. 1975.3.4., pp. 58-59.

59) [한국외교문서] 면담요록. 1975.3.27. pp. 63-64.

60) Selig S. Harrison(1975), p. 15.

61) [한국외교문서] 면담요록. 1975.4.7., pp. 73-74.

62) [한국외교문서] 「한국근해 석유탐사활동과 관련한 미국정부의 입장 및 조치에 대한 대책회의의 결과보고」. 1975.4.15., pp. 87-90.

63) [한국외교문서] 외무부장관이 주미대사에게 보내는 전신(WUS-05133). 1975.5.9., pp. 108-109.

64) [한국외교문서] 주미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신(USW-05656), 1975.5.29., pp. 112-114.

기에는 정부 고위층의 고려도 반영되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 결국 한국과 석유탐사 계약을 체결했던 美 석유회사들은 한국에서의 철수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 인근 대륙붕에 대한 탐사조광권을 가지고 있던 텍사코(Texaco), 걸프(Gulf), 셸(Shell) 등 3사가 그 권리를 포기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1977년 1월 22일 상공부 보고를 통해 밝혀졌다.⁶⁵⁾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이 설정한 대륙붕 광구 중에서 1광구에서 6광구까지의 탐사조광권을 가진 석유회사들의 경우 철수를 결정한 반면, 한일공동개발 구역에 해당하는 7광구의 탐사조광권을 가진 코암사는 잔류를 결정하였다는 사실이다. 한미간의 모종의 거래를 암시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외무부는 9월 10일 작성된 「한국 근해 대륙붕개발에 관련된 문제」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한국 근해 석유탐사 활동에 부정적인 미국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⁶⁶⁾ 이 문건은 표면적으로는 1975년 말로 예정된 포드(Gerald Ford) 대통령의 순조로운 베이징 방문을 위해 취해진 것이지만, 속내는 지금 중국을 향해 자국의 태도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이후 석유문제를 둘러싼 고위 정책대화에서 곤란한 입장에 빠질 것을 우려했다고 평가하였다. 요컨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배려는 美 석유회사들이 오일 쇼크의 발생으로 중국의 유전개발 참여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석유에 깊이 관여하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출발한 것이며, 따라서 막대한 석유개발 잠재력을 가진 중국과의 대립적이고 충돌적인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문건은 시추에 사용되는 탐사선 장비에는 원자력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첨단 장비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의 수중에 넘어갔을 때의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도 미국의 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였다.

정리하자면, 미국은 오일 쇼크의 영향으로 석유자원이 절박한 한국정부가 근해 석유탐사에 적극 나섬으로써 1968년 북한과의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처럼 중국과의 군사적 분쟁상황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였고, 해저유전 개발로 인한 동북아의 분쟁상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자국 석유회사의 시추활동을 막으려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해저유전 개발로 인한 서해와 남해에서의 중국과의 군사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긴 했지만, 일본으로부터의 경제협력이 필요한 중국의 입장으로 봤을

65) 『朝日新聞』, 1977.1.22.

66) [한국외교문서] 외무부 아주과(1975.9.10), p. 230.

때 한일공동개발 구역에서의 중국과의 분쟁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인식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정세인식을 받아들여 자국 석유회사 3사에 대해서는 철수를 권고하되, 7광구에 대한 조광권을 가진 코암사에 대해서는 잔류를 허용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 하나 지적할 점은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해저유전 개발로 인한 인접국간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일본 야당의 비준지연 책동에 대해 단독개발과 같은 강경책을 취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기술과 재원이 부족한 한국이 단독개발에 나설 경우 美 석유자본의 기술과 장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이 분쟁지역에서의 자국기업의 석유탐사 시추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주도의 독자개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비준지연에 대해 단독개발이라는 강경수단을 취하기 보다는 일본정계에 대한 로비와 설득외교에 보다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다.

IV. 결론: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공개된 한국 외무부의 외교문서를 토대로 한일대륙붕협정 비준을 둘러싸고 어떠한 한일관계가 전개되었으며, 이해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본문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정부는 일본국회의 협정에 대한 조기비준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각적인 대일외교를 전개하였다. 한국은 일본의 최고위층 인사에 대한 접촉을 비롯하여 집권자민당, 대야당, 친한단체인 일한협력위원회와 일한의원연맹에 대한 전방위적인 설득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양국의 국내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대여론공작에도 적극 나섰다.

둘째, 한국정부는 일본국회의 조기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하나로 단독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서둘렀다. 한국이 마련한 대책은 탐사와 시추를 분리시켜 탐사를 먼저 진행하되 차후 일본이 비준안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공동탐사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체 기술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탐사중심의 단독개발도 그 실행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등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셋째, 협정체결을 전후로 제기되는 중국의 항의에 대해 한국은 중국과의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였지만,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중국은 한국의 접촉시도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일본의 경우 중국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중일 3자 합의가 필요하지만, 한중간 국교가 없는 상황에서 3국간 합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합의는 비현실적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넷째, 중국과의 해양분쟁 발생을 우려하는 미국은 1971년과 1975년 두 번에 걸쳐 한국정부와 자국 석유회사에 대해 탐사개발을 중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석유탐사 중지압력은 한국이 일본의 비준지연 책동에 대해 단독개발로 응수하기 보다는 대일 설득외교를 한층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대륙붕협정에 대한 한일양국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의 저변확대 필요성이다. 2023년 양국 수뇌의 정치리더십 발휘로 인해 한일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진입한 지금이야말로 만료시기를 5년 앞둔 협정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보여진다. 물론 한일외교당국간 공식적 외교채널을 통한 논의가 문제해결의 기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더해 협력의제 창출자로서의 한일·일한의원연맹의 활동⁶⁷⁾, 양국 학계, 전문가 그룹, 경제계의 활발한 논의 그리고 양국 언론 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홍보도 추진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각에서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서 단번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한 다음에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협정에 반영되어 있는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우호협력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지 한일양국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둘째, 공동개발 여부를 떠나 협정에 대한 한·일·중 3자간 협의에 대한 준비도 다각적인 시각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을 통해 한일양국은 협정체결 직후 중국과의 협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중간 국교가 단절되었던 당시 동북아 정치지형의 한계로 인해 3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1992년 한중수교로 국교단절의 한계는 극복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경위를 고려한다면 향후

67) 정미애(2023), p. 16.

재차 중국이 협정관련 문제를 제기해 올 경우 한일양국은 3자 논의에 대한 준비도 선택지의 하나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하고 이 글을 마치기로 한다. 본 연구는 2019년에 공개된 한국의 외교문서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 외무부의 주관적 정세인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 외교사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외무성 외교문서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s)이 소장하고 있는 미국무부 외교문서를 적극 발굴하여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미국의 외교문서는 양국의 대륙붕협정에 대한 인식과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과 공식적 외교관계가 없었던 중국의 인식과 전략을 파악하는 데에도 상당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고일	2023. 11. 03
1차 심사일	2023. 11. 27
게재확정일	2023. 11. 27

■ ■ 참고문헌

1. 박창진. 2021. 「지경학의 국가경제전략으로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체결’에서 ‘발효’까지 한일정치과정」. 『사회과학연구』, 제29집 제2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 박철희. 2011. 『자민당 정권과 전후체제의 변용』,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3. 안도 준코. 2015. 「한일대륙붕협정 연구: 공동이익 개념과 한일해양질서의 재검토」.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지역학과 박사학위 논문.
4. 양희철. 2012. 「중일 동중국해 자원개발 합의의 법적 해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국제법학회논총』, 제57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5. 윤하정. 2011. 『어느 외교관의 비망록』, 기파랑.
6. 이상현. 2022. 「1970년대 초반 한일대륙붕 분쟁과 비공식 외교: 한일협력위원회를 통한 야쓰기 가즈오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어도저널』, Vol. 22, 이어도연구회.
7. 정미애. 2023. 「의회외교의 현황과 과제: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세종정책브리프』, No. 2023-5, 세종연구소.
8. Takeyama, Masayuki. 2019. “Japan's Foreign Negotiations over Offshore Petroleum Development: An Analysis of Decision-Making in the Japan-Korea Continental Shelf Joint Development Program,” in Freidheim, Robert. et al, Japan and New Ocean Regim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9. Harrison, Selig S. 1975. “China: The Next Oil Giant.” Foreign Policy, No. 20.
10. 池田慎太郎. 2011. 「自民党の親韓派と親台派：岸野武助・石井光次郎・船田中を中心に」. 李種元・木宮正史・浅野豊美『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Ⅰ 東アジア冷戦編』, 法政大学出版会.
11. 池田慎太郎. 2015. 「自民党と日韓・日朝関係：冷戦下の党内対立と議員外交」. 『現代韓国朝鮮研究』, 第15号, 現代韓国朝鮮学会.
12. 外務省情報文化局. 1977. 『日韓大陸棚協定 早期締結の必要な理由』, 東京：外務省.
13. 亀田晃尚. 2021. 『尖閣諸島の石油資源と日中関係』, 東京：三和書籍.
14. 朴敏圭. 2001. 「一九七〇年代の日韓関係と日本外交：日韓大陸棚共同開発協定を中心に」. 『法学政治学研究』, 第51号, 慶応義塾大学法学研究科.

15. 山本健太郎. 2021. 『政界再編：離合集散の30年から何を学ぶか』, 東京：中公新書.
16. 山本剛士. 1983. 「日韓関係と矢次一夫」, 『国際政治』, 第75号, 日本国際政治学会.
17. 民社党本部教宣局. 1977. 「日韓大陸棚協定になぜ賛成したか」, 『革新』, 第84号, 民社党.

[한국외교문서] (등록번호, 문서철명 순으로 작성)

4570.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협정. 전30권(V.4 1971)』
 - 「대륙붕 경계협정 문제」, 작성일 불명. p. 149.
8043.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상임위원회, 1975』
 - 한일협력위원회사무국. 「제12회합동상임위원회회의록」. 1975 .1.12.-14, p. 54.
 - 한일협력위원회사무국. 「제13회합동상임위원회회의록」. 1975 .12.8.-9, p. 92.
8747. 『한국 근해 대륙붕 개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및 각국반응, 1973-75』
 - 「한국근해 석유탐사활동과 관련한 미국정부의 입장 및 조치에 대한 대책회의 결과보고」. 1975.4.15. pp. 87-90.
 - 면담요록. 「경제차관보 김동휘, 주한미대사관 Hurwitz 정무참사관」. 1975.3.4., pp. 58-59.
 - 면담요록. 「박동진 장관, 주미대사, 주유엔대사, 잉거솔 차관, 스나이더 대사」. 1975.3.27., pp. 63-64.
 - 면담요록. 「미주국장, 주한미대사관 Hurwitz 정무참사관」. 1975.4.7., pp. 73-74.
 - 외무부장관이 주미대사에게 보내는 전신(WUS-05133). 1975.5.9., pp. 108-109.
 - 주미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신(USW-05656). 1975. 5.29., pp. 112-114.
10461. 『한·일본 의원연맹, 1977』
 - 「한일의원연맹 6차 총회 공동성명서」. 1977.2.26., pp. 241-242.
 - 「김종필 회장의 후쿠다 총리 면담」. 1977.2.17., pp. 225-227.
12000.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협정. 전30권(V.14 1974.3-12월)』
 - 주일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JAW-05332), 1974. 5.20., p. 204,
 - 주일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JAW-02180), 1974. 2.11., pp. 73-74,
12001.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협정. 전30권(V.15 1975)』
 - 주일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JAW-05848), 1975.6.2., p. 194.

- 대통령각하 외무부 보고사항(방조741-1205호). 「한일대륙붕협정의 비준 촉구」. 1975.9.13., p. 271.
- 12003.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협정. 전30권(V.17 1976. 5~12월)』
 - 「대륙붕 비준안 심의」. 작성일 불명, pp. 118-120, 127-128.
 - 주일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JAW-10601). 1976.10.22., pp. 234-235.
- 12004.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협정. 전30권(V.18 1977. 1월~4.16)』
 - 외무부장관이 주일대사에게 보내는 전문(WJA-01140), 1977. 1.15., pp. 20-21,
 - 외무부장관이 주일대사에게 보내는 전문(WJA-04309), 1977. 4.16., p. 347.
- 12006.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협정. 전30권(V.20 1977. 4.28-5.16)』
 - 외무부. 「대륙붕개발 추진계획」. 1977.4.28., pp. 2-29.
 - 「대륙붕 단독개발 대책회의 내용」. 1977.5.3., pp. 145-151.
 - 외무부장관이 주일대사에게 보내는 전문(WJA-0548), 1977.5.3., p. 157.
- 12007.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협정. 전30권(V.21 1977. 5.16-6.17)』
 - 주일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JAW-05951), 1977. 5.31., pp. 100-102.
- 12009.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협정. 전30권(V.23 1978. 1~4월)』
 - 외무부. 「한일대륙붕협정 자국내조치법의 조기처리촉구대책(안)」. 1978.4., pp. 214-222.
 - 외무부. 「대륙붕 일 국내조치법 처리지연시 대비책」. 1978.4., p. 195.
- 12010.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협정. 전30권(V.24 1978. 5~6월)』
 - 주일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JAW-06265). 1978. 6.13., p. 163.
 - 주일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JAW-06282). 1978. 6.14., p. 167.
- 12011.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협정. 전30권(V.25 각국반응, 1974-75)』
 - 「74.2.4 중공의 외교부 성명」. 작성일 불명. p. 10.
 - 외교부 동북아 1과. 「한·중공 대륙붕 문제를 통한 중공과의 접촉 모색에 관한 건의」. 1974.2.5. p. 13,
 - 국외일일정보. 「중공의 한일대륙붕협정 비난태도 분석」. 1974.3.9., pp. 60-66.
 - 외무부. 「황해 및 동지나해에 있어서의 중공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주장과 관계국가의 태도」. 작성일 불명. p. 273.

- 외무부 아주과. 『한국근해 대륙붕 개발에 관련된 문제』. 1975.9.10., p. 230.
- 12012.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협정. 전30권(V.26 각국반응, 1977)』
 - 주일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JAW-06337), 1977.6.14., pp. 43-44.
- 12013.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협정. 전30권(V.27 각국반응, 1978)』
 - 외무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에 대한 중공 태도』. 1978.5., pp. 10-20.

[국내외 신문기사 및 기타자료]

- 『경향신문』. 1974. 『한일대륙붕협정 조인』. (1월 30일).
- 『동아일보』. 1973. 『중화인민공화국 호칭 첫 사용 중공과 대륙붕협정협의를』. (3월 17일).
- 『동아일보』. 1977. 『한일 생사분쟁 타결 막후협상 주역 최영철 의원』. (4월 12일).
- 『동아일보』. 1977. 『대륙붕심의회 진통』. (4월 27일).
- 『매일경제』. 1976. 『비준지연은 우스운 일: 대륙붕협정은 일본이 먼저 제안』. (5월 2일).
- 『조선일보』. 1975. 『자민당 독주시대의 종장: 75회 일본 통상국회에 나타난 이변』. (7월 11일).
- 『조선일보』. 1977. 『일. 대륙붕 비준안 통과』. (4월 28일).
- 『중앙일보』. 1977. 『2백해리 선포작업 마무리: 3일 실무자회의 6일 해양법 대책위 열어 최종 손길』. (4월 2일).
- 『毎日新聞』. 1977. 『日韓大陸棚国内法未整備でも協定批准あり得る』. (11월 15일).
- 『朝日新聞』. 1977. 『米系3社 探查権放棄』. (1월 22일).
- 第72回国会衆議院予算委員会(第13号), 1974.2.6.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https://kokkai.ndl.go.jp/txt/107205261X01319740206> (2023년 11월 2일)
- 第75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第28号), 1975.7.4.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https://kokkai.ndl.go.jp/txt/107503968X02819750704> (2023년 11월 2일)

